급한 불 껐지만… 시기·방법 싸고 내분 불씨 여전

새정치 文대표·중진 재신임 투표 연기 극적 합의

안철수 "투표 취소" 촉구 시끌
비주류 불만 속 연기 압박
혁신안 의결 중앙위 예정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당 중진들의 합의에도 불구,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와 혁신위원회 공천혁신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12일 3선 이상 중진들의 중재안을 수용해 재신임 투표는 일단 연기하기로 했으며, 공천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정대로 개최키로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강행 방침으로 인해 강대강으로 치닫던 내분 사태는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날 합의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안 전 공동대표는 13일 문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재신임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 문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중앙위 무기 연기와 재신임투표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재신임을 여론조사(국민·당원)로 묻겠다고 일방적 선언을 하고 퇴장한 것은 독선"이라고, 김부겸 전 의원은 "문 대표는 재신임 카드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여전히 비주류 측에서는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일각에서는 재신임 투표를 국감 이후로 연기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표 방법은 비주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문 대표가 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국감 이후로 재신임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주류 내에서도 중앙위의 혁신안 의결 절차를 되돌리긴 힘들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3일 "혁신위가 처음부터 9월까지 활동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중앙위는 예정대로 16일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주류는 예전처럼 거수나 박수로 한다면 주류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라고 보고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주류 의원은 "문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혁신안을 연계시킨 상태"라며 "인사에 관한 사항을 비밀투표로 한다는 당무위 의결 규정을 원용하면 중앙위도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7시50분부터 40분가량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당내 3선 이상 중진 모임의 대표격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 박병석 의원과 회동을 갖고 애초 13~15일 실시키로 했던 자신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신임을 위한 시기와 방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대신 중진 모임이 혁신안 의결을 위해 16일 소집된 중앙위 연기 요구를 철회하면서 중앙위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재신임투표 방법에 대해서 문 대표는 중진 모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요청, 자신이 정한 '전당원 ARS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중진 의원들이 "재신임 문제는 시간을 갖고 시기와 방법에 관해 중지를 모아 신중히 결정해달라"며 재신임 시점을 '국감 후'로 제안했으나, 문 대표는 "시기를 연기하되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 짓자"는 의견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창당 60주년 사진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 창당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과 지하통로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류 추석 전, 당 장악…총선체제 조기 전환
비주류 국감 후,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방점

재신임 투표 시기 엇갈린 셈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말에 실시키로 했던 재신임투표를 일단 연기키로 하면서 최종 실행 시기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추석 전'에 끝내자는 문 대표 등 주류 측과 '국정감사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비주류 진영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마지노선을 '추석 전'으로 제시한데는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거취 논란을 조기에 종결짓고 당을 장악,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에 시간을 끌수록 비주류 진영의 흔들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추석 전에 재신임 문제를 마무리 지어 안정된 당의 모습으로 추석 민심을 끌어오겠다는 포석이다. 문 대표는 지난 12일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추석 전에는 (재신임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훨씬 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반해 비주류 진영에서는 국감 이후에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의 꽃이자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가 '재신임 블랙홀'에 빠져든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배경에는 주류 측의 재신임 국면에 제동을 건 뒤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방향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재신임 투표 자체가 혁신을 명분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요식 절차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문 재인 대표의 당내 입지만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으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비주류 측의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16일 중앙위에 붙여지는 혁신안의 운명 등에 따라 재신임투표의 향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혁신안이 통과한다면 굳이 당내 분열을 심화시키면서까지 재신임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재신임투표 카드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내 관계자는 "중앙위에서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중앙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을 통해 혁신안 반대표가 상당수 나온다면 재신임 시기 등을 놓고 당내 분란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준영 前지사 내일 '신민당' 창당 선언

이달 중 발기인대회 연내 창당 마무리…천정배 신당도 가속

박준영〈사진〉 전 전남지사가 오는 15일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지사가 창당을 공식화한데 이어 무소속 천정배 장관의 신당 창당도 가속화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의 지형 재편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박 전 지사는 13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민당 창당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발기인대회를 거쳐 창당준비위를 발족하는 등 연내에 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중도주의를 이념적 지향점으로 표방하고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보통사람들을 위한 정당, 일하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당에 현직 국회의원의 참여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박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주선 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당은 1967년 분열된 야당 세력이 통합해 만든 정당으로, 197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겨뤘던 정당이기도 하다. 당명을 이처럼 정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을 이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지사 3선을 지낸 박 전 지사는 지난 7월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